

중용 사상의 현대사회 갈등 전환 관련 활용 연구: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mesotēs)과 갈등전환이론을 중심으로*

함규진**

이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의 갈등 심화 현상에 대하여 그 완화 또는 전환을 위한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갈등전환이론을 적용해 보려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mesotēs) 사상은 미덕이 과도하거나 부족할 때, 또는 미덕 내적으로나 미덕들 사이에서 편향될 때 악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를 지양하고 적도를 선택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보존하고 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현대의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 가운데 갈등전환이론과 친화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중용 사상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갈등전환이론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본 충실, 대립 인정, 패권 배제, 완전 참여라고 하는 4개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현대 한국사회의 두 가지 갈등 사례에 가상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이를 보다 구체화, 체계화하여 향후의 갈등 사례에서 활용한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 심화에 대해 믿을 만한 대응책이 되는 한편 현대사회에서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민주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실현 가능할 수 있다.

주제어: 사회적 갈등, 중용(mesotēs), 갈등전환이론, 속의

I. 서론

오늘날 한국은 '초갈등사회'(성신형 2024, 12)라는 표현마저 익숙할 정도로 각종 갈등이 끝없이 출몰하며, 좀처럼 원만한 해소 또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에서 공동조사한 "2024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92.6퍼센트의 국민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5) 그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환해야 할 정부는 도리어 그런 갈등을 방치 또는 창출

* 이 논문은 2025년 서울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논문 심사를 맡아 주시고 중요한 조언을 해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함.

** 서울교육대학교(hmurabi@snue.ac.kr)

하며 악화시키는 존재로 82.9퍼센트의 국민에게 불신받고 있다.(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5)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5년에서 2015년까지 OECD 35개국 가운데 조사가 수월했던 30개국의 '사회통합지수' 비교조사를 한 결과, 최종 2015년 조사 시점에서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30개국 중 29위, 사회갈등 관리에서는 30개국 중 26위라는 심각한 상황을 나타냈다.(정해식 외 2016)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갈등지수 비교조사에서 한국이 55.1p로 30개국 중 3위를 나타낸 것에서도 공명된다.(노정연 2021)

물론 한국 사회가 유혈사태를 포함하는 극단적이고 파멸적인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 국민들의 행복도를 현저히 낮출 정도로 인식되는 갈등의 수준이 높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 건설적, 근본적으로 해소된다기보다 임시방편적 거래 또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단기적이고 표면적으로만 해소되거나,(김명환 외 2017, 3) 폭발적인 분출 뒤에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도 결코 악화 내지 전환되지 않고 또 다시 폭발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¹⁾에서 사회통합의 곤란, 공동체적 문제 해결과 발전의 가능성 저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서는 이런 사회갈등이 특정 사건을 통해 발생, 분출했을 때 그것을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 일조할 '협의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mesothēs)사상을 응용하고 갈등전환적 접근법을 원용하여 고안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용 사상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의 첨예함을 완화하고, 숙의에 따른 합의의 가능성을 높인다.²⁾ 또한 갈등전환이론은 당장의 갈등 상황(episode)을 표면적, 일시적으로 제거하기보다 갈등의 배경에 내재한 진원지(epicenter)를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갈등을 점진적으로 순화하고 긍정적 요소가 많도록 변화시킨다.

II.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mesotēs) 사상

'무엇이든 적당한 게 좋다'는 굳이 철학적 체계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식적 지혜의 차원이 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과 악덕의 관계를 깊이 사유하여 단순한 '중도'가 아닌 '중용' 사상을 전개했다.

1) 2016년의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급진적인 여성주의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이후 잦아드는 듯했으나 수 년이 흐른 2024년에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논란'을 계기로 다시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이 한 예다.

2) '중용(中庸)'이라는 번역어를 mesothēs에 사용하는 것에서도 보듯, 묘하게도 동서양의 중용 사상은 모두 그런 효과를 낼 잠재력이 있다고 여겨지며, 동양의 중용사상을 근거로 개인의 갈등 문제에 적용한 연구도 있다(안도연, 이훈진 2019). 동서양의 중용을 함께 적용해 오늘날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있다.(최상용 2012; 함규진 2024) 다만 여기서는 논의의 간결성과 집중성 확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사상만을 다룬다.

1. 중용의 실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한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적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그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 각자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한 상태를 ‘탁월성(aretē)’에 이른 상태라고 하며(EN 1098a)³⁾, 그러한 탁월성, 또는 미덕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도(to metron)로서의 중간, 중용을 추구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EN 1106a).

“탁월성은 적절한 중간을 지향하는 일종의 중용이다.”(EN 1106b)

그러한 중용은 단순히 산술적인 중용이 아니며, 주체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중용이다. 가령 『영혼론』에서 올바른 인식은 ‘지각의 중용’에 의해 달성되며, 그런 지각의 중용은 또한 적절한 감정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PP 431a). 『니코마코스 윤리학』 등에 따르면 그러한 감정 상태는 적절한 이성의 인도에 따라 절제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기도 하므로(EN 1102b; HE 1229a), 중용은 인간의 윤리 규범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은 본래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파괴된다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절제(sōphrosynē)와 용기(andreia), 그리고 다른 미덕의 경우에도 같다. 뭐든지 피하고, 두려워하며, 뭐든지 맞서지 못하면 비겁한 사람이며, 반대로 뭐든 두려워하지 않으며, 뭐든 맞서려 든다면 무모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즐거움을 빠짐없이 누리려 들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무절제한 사람이며, 반대로 일체 즐거움을 피하기만 하면 문화인답지 않은 무미건조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제와 용기는 지나치거나 모자랄 때 파괴되며, 중용(mesothēs)을 갖출 때 보존된다.”(EN 1104a)

이렇게 볼 때 중용이란 무엇이든지, 설령 그것이 하나의 미덕일지라도, 적도를 지나치면 모자람은 물론 지나치더라도 악덕으로 바뀌게 되므로 그 적도에 머물러야 함을 의미한다. “중용은 두 가지의 악덕, 즉 지나침으로서의 악덕과 모자람으로서의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EN 1107a)

그런데 이는 본래 하나로 여겨지는 미덕, 그리고 정감, 행동 등이 사실은 다른 두 가지 품성의 상태(hexis)를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용기에는 ‘치밀함’과 ‘기개’가 내재되어 있다. 지나치게 치밀하기만 할 때 용기는 비겁이 되며, 기개가 과도할 때 용기는 무모함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근거한다. 용기란 그 자체로 미덕이 되지 않는다. 외부의 침입에 대해 자신 및 소속한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용기를 내어 싸우고, 그리하여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기에 미덕인 것이다.⁴⁾ 그런데 치밀함이 없이 기개만으로 무모한 싸움을

3)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대해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EN으로, 『에우테모스 윤리학』은 HE로, 『정치학』은 PO로, 『영혼론』은 PP로 표시하는 관행을 따른다.

4) “원래 용기란 일상의 일에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 그것이 유용한 경우는 전쟁 때 뿐이다.”(PO 1269b);

하다 보면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기개가 없이 치밀함이 지나치면 전장에서 후퇴를 거듭하게 되고, 결국 패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그런 용기의 과다 또는 과소는 미덕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절제는 ‘탐닉’과 ‘무관심’을 포함한다. 지나치게 탐닉하면 생활이 무절제해지며, 그에 따라 건강,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워진다. 반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면 좋은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탐닉마저도 없으므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하나의 미덕이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한다면, 그리고 미덕의 과다 또는 과소가 둘 중 한 요소를 소홀히 함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곧 ‘치우침’이 된다. 즉 악덕이란 미덕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임과 동시에, 한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것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비에서의 중용은 “자유인다움(eleutheriotēs)으로, 지나치면 낭비(asōtia), 모자람은 인색(aneleutheria)이다”(EN 1107b), “자유인다운 사람은 재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편,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재물을 쓰는 일을 선호하며 반대의 경우를 아쉬워한다”(EN 1121a)라고 한 것도 분석하자면 소비 당사자의 품성에 ‘재물에 연연해하지 않음’과 ‘재물을 헛되이 쓰기를 싫어함’이 고르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재물에 연연해하지 않음에 치우치면 낭비에 빠지고, 재물을 헛되이 쓰기를 싫어함에 치우치면 인색해지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미덕이 적도에서 벗어나면 악덕이 되는 한편, 하나의 미덕과 다른 미덕이 충돌하는 경우에 하나의 미덕만을 고집해도 악덕이 된다. 소비와 관련된 재산 소유 문제를 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접근한다.

“『법률』에서 플라톤은 절제만을 말한다(...) 그러나 절제 있게 살 뿐 아니라 선심을 쓰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재산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두 목적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따로 떨어지면 넉넉함이란 사치가 되기 쉽고, 절제는 인색함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PO 1265a)

소비의 절제도 미덕이고, 관용도 미덕이다. 두 목적이 충돌할 경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두 가지 미덕을 균형 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용에 실패하면 사치와 낭비를 일삼거나 최소한의 배품도 거부하게 되고 만다.

마지막으로, 이는 사적인 욕망과 공적 과제에 대한 배려심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함을, 달리 말하면 공적 과제에 대한 배려심을 적절히 환기하도록 욕망을 이성적으로 절제해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중용으로서의 용기’에 있어서, 개인의 명예욕만 앞세운다면 무모한 용기도 탁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안전만을 고려한다면 비겁함도 현명한 것으로 여겨질

“사려는 그것이 유용하지 않은 이상, 고통과 파괴를 감행하라 지시하지 않는다.”(HE 1229a) 결국 탁월성이란 그 사물을 좋은 상태로 만드는 한편 ‘그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말의 탁월성은 건강한 말인 동시에 탐승용, 화물용, 전투용 등에 좋은 것이다(말의 이익만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좋을지 모르나). “인간의 탁월성이란 그에 따라 좋은 인간이면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EN 1106a)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사적인 욕망에 치우쳐 공적인 배려를 저버린 것이다. ‘중용으로서의 자유인다움(또는 절제와 관용 사이의 중용)’에 있어서도, 재물에 연연하지 않다 보니 얻게 된 ‘관대한 사람’이라는 평판 자체에 집착하다 보니 허영심이 발생해 낭비를 부추기고, 효율적인 소비에 대한 편향된 고려가 재물 자체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며 사람을 수전노로 만든다. 지나치지 않으면서 가치 있는 소비는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하므로, 공과 사의 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란 하나의 정감이나 행동에 내재된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과도한 지배력을 갖지 않도록 조화(harmonia)와 균형(isorropia)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화와 균형은 미덕 자체에 있어서, 미덕과 미덕 사이에 있어서, 공과 사에 있어서 두루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중용의 의의: 기본 목적의 보존과 성취

이러한 중용은 결국 인간을 비롯한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고, 과도함이나 치우침에 따른 자체의 파괴를 막는 의미를 가진다. 그는 『영혼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감각 대상이든지, 과도하면 감각 기관을 파괴해 버린다 (...) 파괴는 그 감각 기관만이 아니라 해당 동물에까지 미친다 (...) 동물이 여러 감각을 지니는 까닭은 다만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선(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이다”(PP 435b)라고 한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환경에서는 동물/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 그러기에 감각 기관, 다시 말해 촉각 기관은 그런 감각을 지각해,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한편 촉각(미각도 포함된다) 외에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기능은 생존만이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해 기능한다. 고차원적 삶에 필요한 섬세한 감수성, 심미(審美) 등이 이런 감각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감각들을 과도하게 추구할 경우 건강이 파괴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을 잃고, 심하면 자신의 생명 자체까지 파괴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감각은 늘 적도를 지키며 추구되어야 한다.

인간의 경우 감각 중용은 품성의 중용과 이어지며, 앞에서 본 대로 중용에 어긋나는 품성은, 그것이 만용이나 비겁이라면 공동체와 공동체에서의 좋은 삶을 파괴하며, 사치나 낭비, 무절제한 탐닉, 또는 인색함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그리고 사회적 평판이나 재산을 파괴해 버린다. 그것은 데보라 아텐버그(Deborah Achtenberg)의 분석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존재의 목적을 보존하고 달성하려는 것이며, 존재의 목적이란 존재의 구성적 한계(constitutive limit)로서 또 다른 한계인 존재의 파괴에 대항하기 때문이다(Achtenberg 2002, 28). 결국 중용을 모색하며, 우리는 기본적 가치로 돌아간다. 그리고 혼란과 부패(decay)에 맞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한다.

3. 중용의 탐색: 정치적 정의와 다수의 속의에 의한 실천지 발현

그러면 어떻게 중용을 모색할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플라톤이 모든 지혜를 합리적 지혜(epistēmē)로 풀이한 것을 비판하며(EN 1141a), 이와 달리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며, ‘지금, 여기,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용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실천적 지혜(phronesis)에 주목했다(EN 1141a; 1141b; 1142b). 실천적 지혜는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이며, “이성을 동반한 참된 실천적 품성상태”로 “의견을 형성함(doxastikon)에 있어서의 탁월성”이다(EN 1140a; 1140b) 인간은 이 실천적 지혜에 따라 선악을 구분하고 적도를 찾음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보존하고 성취할 수 있다.(EN 1146a)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모색이란 개인이 그 내면을 조절하고 사회적으로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공적,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존립한다고 보았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는 정치적 정의(to politikon dikaion)를 찾는 과정에서 중용을 찾는다. 그런데 정의란 하나의 탁월성이되 ‘유일하게 타인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보이는’ ‘탁월성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탁월성이며(EN 1129b),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동을 어떻게 조절해야 그들이 ‘좋은 행동(eupraxia)’을 통해 ‘인간적 좋음(anthrōpinon agathon)’을 달성할지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EN 1094b). 따라서 정치적 정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그 구성원들이 서로를 좋게 해주려 할 때 성립한다.(EN 1134a)

앞서 본 중용의 성격은 정치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먼저, 그것은 기본 목적을 보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책이나 법률은 중용에 어긋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한 국가를 동질적 체제로 만드는 일은 흔히 이상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오히려 국가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면서 이렇게 경고한다.

“어떤 사물의 선(善)이란 그 사물을 파괴하기보다 보존하는 것이어야 한다.”(PO 1261b)

정치란 여러 개인의 집단적 정감 및 행동에 따라 구성되는데, 이에도 두 가지 요소가 내재된다. 크게 보면 정책 방향에 있어서 급진 지향성과 온건 지향성(또는 진보/보수), 정책의 수혜집단에 있어서 친엘리트와 친서민(또는 친부자/친빈민) 등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 중 어느 하나가 과도히 지배하거나 조화를 기피하는 정치를 배격한다. 가령 과격하고 급진적인 개혁정책으로 다양성을 말살하려 하는 정치(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나 팔레아스가 주장한 재산균등제 등도 그런 예다)는 정치가 아니게 된다.

“...어느 정도에 이르면 동질성이 높은 국가를 넘어서 국가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음악에 있어 어떤 주제를 단 하나의 박자로 처리해 버리거나 화음(和音)을 동음(同音)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다.”(PO 1263b)

한편 개혁이 전혀 실종된 정치 역시 때에 적절히 필요한 변화를 차단하며, 그리하여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한다. 또한 엘리트가 다수의 서민을 억압하거나 반대로 서민의 다수의 힘으로 엘리트의 입장을 배제하여 자신들만의 정의를 추구하는 상황, 그것은 곧 공적인 배려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상황으로, 중용을 잃은 자기파괴적 정치 내지 정치의 파괴이다.

“과두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은 모두 각자의 정의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그 생각을 확대하지 못하며, 어느 쪽도 정의의 진정한 개념을 오롯이 내놓지 못한다(...) 어느 쪽도 양측이 모두 진정 중요한 점,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의 본질에 닿지 못한다”(PO 1280a)

“만약 빈민들이 그들이 다수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자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 나눠 가지자고 결정하면 어떨까? 어찌 부정의가 아니겠는가? (...) 다수가 소수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동은 다름 아닌 국가를 파괴하는 행동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미덕이란 결코 그것을 보유한 존재를 파괴하지 않으며, 정의는 결코 국가를 파괴하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참주의 행동도 정당할 것이다(...) 그런 행동은 부유한 소수에게도 올바르지 않다. 그들이 서민의 재산을 빼앗는 게 정당하다면, 서민이 부자의 재산을 빼앗음도 정당할 테니 말이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은 선하지 않으며, 정의롭지 못하다.”(PO 1281a)

그러나 정치에 중용이 필요하다고 두루 공감하고 있더라도, 의사결정권이 다수에게 있는 이상 그 가운데 사정(私情)에 빠져 중용을 무시하는 경우가 없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문제는 철학적 문제와 달리 “많은 차이와 가변성에 따라” 어떤 경우이나 보편적인 해답을 찾기 어려우며(EN 1094b) 어떤 문제의 중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한 단순 계산으로 찾기보다 그때그때의 상황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EN 1109b; HE 1222a)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이 중용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EN 1134b; 1140a; 1277b).

그렇다면 플라톤의 철인왕처럼 실천적 지혜에 탁월한 한 사람이 정치적 결정권을 독점하도록 하는 게 대안일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도 그런 뛰어난 인물의 예로 페리클레스를 들고 있지만(EN 1140a), 아무리 고결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걱정이나 사정에 빠져 중용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며(PO 1286a) 집단의 실천적 지혜가 발휘되면 탁월한 개인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낫기 때문에(PO 1281b; 1286a),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이익 및 주장이 소외되면 그만큼 반발하고, 법을 무시하며, 내란을 도발하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PO 1281a) 다수가 결정하는 편이 낫다.

그러면 다수가 결정하면서 어떻게 최대한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중용의 정치를 실현하도록 할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기 위한 숙의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중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⁵⁾ 그런 숙의를 거쳐 제정된, ‘잘 만들어진 법’은 그 자체가 중용

5)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언어학이 아니라 정치학의 분과 학문으로 배치했다(EN 1094b).

이므로(PO 1287b) 이 법을 지켜나가면서 독단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PO 1282b). 중용적 속의를 달성하려면 부자도 빈자도 아닌 중산계급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잡고, 서로 대립하는 계급의 주장을 중재, 조절하는 정치적 안배가 필요하며(PO 1295b), 민주정에서는 과두정적 요소를, 과두정에서는 민주정적 요소를 적극 도입-활성화함으로써 정체가 지나치게 동질화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안배 또한 필요하다(PO 1298a). 이러한 정체를 혼합정이라고 한다(PO 1297a).

이상의 정리를 통해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사상은 다만 개인적 수양과 미덕의 추구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 이익 충돌이나 견해 차이에 따른 갈등이 벌어질 경우 그러한 갈등은 한편으로 당연하며, 대립되는 입장은 각각의 중요한 의견을 나타내는 한편 반대되는 입장의 근거 또한 내재하기에, 어느 한 진영이 다른 진영을 압도하려 하거나 편향된 입장만이 고집될 경우 공동체 자체가 파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관용과 이해와 더불어 끈기 있고 문제의 본질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이에 맞춰 협의를 통해 현실을 재해석하는 속의 과정이 모든 구성원, 구성 집단의 적극적이고 공평한 참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 때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별 이익들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는 한편, 공동선을 담보하는 대안이 되도록 집단 차원의 실천적 지혜가 발휘될 수 있다.

III. 현대사회의 갈등과 갈등 전환

1. 현대사회 갈등의 유형

갈등이란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갈등,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 개인과 집단간, 집단과 집단간 갈등 등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할 갈등이란 ‘사회적 갈등’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동체의 문제’로 본 사회적 갈등 또한 분류가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갈등의 주된 목적과 지향점, 그리고 전개 과정의 추세를 기준으로 하여 ‘이익 충돌(clash of interests)적 갈등’과 ‘공공 의제(common causes)적 갈등’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1) 이익 충돌적 갈등

이익 충돌적 갈등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충이 발생하는 결과에 따른다. 이때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는 제로섬(zero-sum)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단 추정된다. 즉 어느 갈등 당사자의 이익이 강화된다면 그만큼 다른 갈등 당사자의 이익이 훼손되는 구조가 존재한다.

긍정적 이익 파생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고속도로, 신도시 등)의 유치를 놓고 후보

지역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부정적 이익 파생이 기대되는 사회간접자본(이른바 혐오시설 등)의 유치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정부 당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런 이익 충돌적 갈등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익 충돌적 갈등의 경우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될 수도 있으나, 그에 대해 일방적 불이익을 받은 쪽의 불만과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갈등이 지속되거나 더 큰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정성(fairness)이 발휘되도록 배려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중재에 의한 합의를 통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이익과 손해를 적절히 조정하고, 타협함으로써 갈등을 종결하는 방식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진다.

2) 공공 의제적 갈등

공공 의제적 갈등은 어떤 특정 이해관계자를 전제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의 이익 내지 가치 증진을 목표로 어떤 의제가 제기되고, 여기에 대해 여러 이유로 반대하거나 비판이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가령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권리 신장을 요구하는 논의에 이어 시위 등의 집단행동이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 상당 수준의 반발 내지는 탄압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공공 의제적 갈등의 경우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갈등 당사자들은 제로섬적인 관계가 아니라 윈윈(win-win)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갈등 당사자 사이의 적당한 타협보다 공공 의제의 목표 달성이 더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공 의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방식을 취하고, 현실적 고려를 갖추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발생이나 유지, 갈등 격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분류하더라도, 실제로 사회적 갈등이 정확하게 두 가지 중 하나로 구별되기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공공 의제적인 갈등이라도 그와는 다른 인식을 통해 이익 충돌적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령 장애인이나 여성의 권리 신장 요구는 '비장애인이나 남성의 권익을 훼손하여 그만큼 자신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제로섬적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어떤 기업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익 충돌적 갈등으로 여겨지지만 사회제도와 문화가 노동자를 기본적으로 약자화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 의제적 갈등의 일환이라 이해할 수도 있다.

인식의 차이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공공 의제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특정 개인 및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이익 충돌적 갈등에 보다 보편적이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는 면이 존재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을 최적지에 설치할 경우 사회 전체적 이익이 기대될 수 있으며, 대립되는 이익을 조정하고 그로부터 이후 참고가 될 조정의 기준을 이끌어낼 때 그것이 사회정의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이 시작될 시점에는 이익 충돌/공공 의제 갈등의 성격이 분명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지도부의 변화, 새로운 참여

자의 등장, 새로운 쟁점의 발현, 갈등 관리 방식이 가져오는 효과 등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익 충돌적 성격이 짙은 갈등의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 부당히 부정되는 결과가 없도록 주의하고, 공공 의제적 성격이 뚜렷한 갈등의 경우 해당 공공 의제의 성취를 되도록 추구하면서, 사회 갈등마다 그 공적인 성격을 보다 강조하면서 개별 이익 추구적인 성격을 조절,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사회 갈등의 해소 및 전환에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적합할 것이다.

2.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이론

‘갈등전환 이론’은 애덤 컬(Adam Curle), 요한 갈통(Johan Galtung) 같은 평화학자들에 의해 기초가 놓이고, 존 폴 레더락(John Paul Lederach), 크리스토퍼 미첼(Christopher Mitchell), 카타리나 실링(Katharina Schilling) 등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이론이다.(평화갈등연구소 2016) 갈등 전환은 갈등 해소(또는 갈등 해결, conflict resolution),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의 개념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는 않되, 그것들을 넘어서려고 한다. 갈등 해소는 갈등을 부정적이고 일시적인 현상, 즉 정상적인 사회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리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빠르게 종결지으려는 접근법이며, 갈등 관리는 갈등이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것이 확대, 증폭되지 않도록 되도록 억제하려는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갈등 전환은 갈등을 사회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일뿐더러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으며,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반성과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갈등의 발생이 우발적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지속된 요인(epicenter)을 갖는다고 보아, 갈등의 표면(episode)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배경 요소와 맥락을 찾기 위해 구조적, 심층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갈등을 ‘지우거나’ ‘가두는’ 게 아니라 더 긍정적이게끔 ‘바꾸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Schilling 2012; Lederach 2018; 정주진 2010; 김명환 외 2017; 이무철 2018).⁶⁾

이러한 갈등전환이론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는 “현재의 갈등대응방식이 당면문제의 단기적 해결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므로써 갈등의 원천적 수준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증폭, 장기화·폭력화로 전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김명환 외 2017, 3)을 고려할 때, 대안적인 접근으로 주목받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갈등 당사자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그것도 단지 단기적 불편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한 거래의 주체로만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와 당사자들을 포함한 사회-공동체의

6) 그렇지만 갈등 해소 및 갈등 관리 개념과 갈등 전환 개념이 완전히 뚜렷한 경계를 갖지는 않는다. 갈등 해소의 한 가지 방법론으로 갈등 전환이 논의되기도 하고, 갈등전환 이론에서 제기된 방법과 관점을 기존의 갈등 해소 이론에서 차용하기도 한다(평화갈등연구소 2016). 다만 이러한 대체적인 관점과 중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점을 ‘숙의(deliberation)’라는 틀을 기본적으로 활용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는 주체로 설정하며 그 역량 계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사상과, 또한 숙의민주주의 이론과 친화성이 있다.

그러나 갈등전환이론적 접근법은 두 가지 사회갈등의 유형 가운데 공공의제적 갈등에 더 기울어져 있다.⁷⁾ 또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하며, 역시 친화성을 갖는 회복적 정의론에서처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개념을 상정하므로 공동체적 성향이 거의 없는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 충돌적 갈등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⁸⁾ 또한 갈등이라는 상황에 대하여 그 (단기적)해소나 억제를 넘어서 상대적으로 많고, 멀고, 깊은 목표 달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기에 혼란 내지는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갈등전환이론이 실제 상황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실행의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실행의 과정에서 이 이론에 맞도록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고 유도할 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벌어진 갈등 상황에서 ‘갈등전환적으로 접근하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사자들이 생각할 수 있고, 외부의 전문가 등이 그렇게 권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중에 그런 틀에서 이탈할 경우 회복할 방법이 없고, 과격해지거나 돌발 변수가 발생하기 쉬운 갈등 상황에서는 그런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갈등 상황 초기에 당사자들이 대책 논의를 시작할 때, ‘이런 원칙에 따라 진행하자. 이 원칙이 깨졌을 경우에는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론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 원칙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높으며,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무시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갈등에 내재된 공공적 측면에 주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칙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런 원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사상을 활용함으로써 마련해볼 수 있다.

3. 중용 사상을 활용한 갈등 전환의 원칙

1) 기본 충실의 원칙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물의 선이란 그 사물을 파괴하기보다 보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보았고, 이른바 중용을 찾음이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점을 찾음으로써 본질을 벗어나고 본래의 목적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여겼다. 이런 접근법을 갈등에 대한 논의의 첫머리에

7) 가령 대등한 협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사자 중 약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등이다.(김명환 외 2017, 9; (평화갈등연구소 2016)

8) 그래서 이 이론의 대강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존 폴 레더라흐도 “분명한 것은 갈등전환이 다른 상황보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더 적절하다는 점이다. 이 세상에는 문제 해결적 접근법 또는 협상 등과 같이 더 단순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갈등과 분쟁들도 많이 있다. 빠른 해결책이 요구되는 분쟁들은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이전부터 현재 그리고 이후까지 관계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때도 있다. 이런 경우는 관계와 구조 패턴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Lederach 2018, 87)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입, 논의의 목적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익 충돌적 갈등이라면, 어느 당사자의 이익도 부당히 침해되지 않으면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고 강화하는 ‘공정한 이익 증진(fair enhancement of all related interests)’이 논의의 목적이며 논의의 본질은 그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공 의제적 갈등, 가령 장애인 권리 신장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라면 국가와 공공행정의 사명은 주권자 구성원들이 부당하거나 비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있음을 논의에 참여하는 갈등 당사자들 전원이 합의한 뒤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물론 개별 당사자들로서는 해당 논의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일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자신의 사적 이익 증진을 우선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격화되기 쉬우며, 결국 더 우세한 쪽이 일방적으로 개별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로 끝남으로써(또는 그렇게 보임으로써) 갈등이 저변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재발하게끔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성은 상식적 차원에서 입장이 다른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 설득력과 정당성을 갖는다. 극단적으로 개별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입장이 아닌 한, 진실로 공공성을 띤 목적에 충실한 갈등 전환 논의는 적어도 스스로의 개별 이익이 심각한 침해를 입지는 않으리라는 기대를 심어준다. 그리고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가치관과 시각이 다양하기에 ‘과연 이 갈등의 본질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문제에도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나, 먼저 이 문제를 분명히 정하고 난 뒤에야 안정적인 갈등 전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2) 대립 인정의 원칙

해당 갈등 전환 논의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 어떤 본질의 논의인지를 확정하고 나면, 그 논의에 있어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지향 노선이 존재할 수 있음을,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노선과 반대되는 노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부당한 상황은 아님을 두루 인정해야 한다. 적절한 용기는 치밀함과 기개의 적절한 조합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용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천적 지혜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 적절한 용기를 발휘한다’는 목적에 충실하려면 치밀함 위주의 접근과 기개 위주의 접근이 동시에 상정되고, 이들 사이에서 저울질이 필요한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갈등을 어떻게 전환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물음에는 전혀 상반될 수도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접근법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이는 모든 토의토론과 협상의 기본 상식으로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의 의견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그러한 감정 상태에서 상대의 의도를 의심, 오해하거나 상대가 제시하는 논리, 근거의 의의를 폄하하기 쉽다. 따라서 논의 과정 전반, 또는 적어도 초반에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와 ‘대립되는 의견은 당연하며 또한 필요하다’는 의식을 거듭 되새기고, 재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3) 패권 배제의 원칙

용기라는 미덕을 이뤄낼 수 있는 치밀함과 기개 중 어느 한 쪽이 과도하면 악덕이 남게 되고, 부자와 빈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률은 정의를 담지할 수 없듯, 갈등 전환 논의의 결론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익 충돌적 갈등에서는 물론이고, 공공 의제적 갈등에서도 한 가지의 대의에만 치우친 결론을 낳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동시에 ‘대립될 수도 있는 입장들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설령 어느 한 쪽의 입장이 우세하게 논의가 귀결되었다고 해도, 열세인 쪽의 입장도 반영된 결론만을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만약 현실적인 이유에서 일단 어느 한 쪽의 대쪽 우세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면, ‘다음 논의시의 양보와 배려’ 등이 약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극적으로 갈등 전환의 실패나 갈등의 재연을 방지하려는 원칙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르지만 서로 양립 가능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Lederach 2018, 67)

4) 완전 참여의 원칙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공평하게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고, 갈등전환이론에서 갈등 상황의 배경이 되는 구조와 연혁을 심층 조사하고 드러나지 않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두루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여기듯(Gutmann, Thompson 1996, 147-148; Mitchell 2002) 논의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논의의 과정 중에 ‘발견’된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논의에 참여하여 공평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갈등이 가령 토지개발 문제나 생태환경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면, ‘천성산 도롱뇽’이나 ‘구름비 바위’처럼 스스로는 주의주장을 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배려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숙의민주주의적 토론 과정에서의 현실적 문제점으로 ‘지식, 언변, 사회적 명망 등에서 우월한 참여자가 논의를 지배하고, 상당수의 참여자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최대한 모든 참여자들을 참여토록 하고 최대한 공평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있을 때(이는 결론의 정당화 과정에서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문제점은 최소화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를 발휘할 때 ‘탁월한 개인이나 소수보다 진정한 전부가 의견을 내고 모음으로써 더 강력하게 발휘된다’고 묘사한, 집단지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IV. 현대사회 갈등에의 적용

이처럼 중용사상에 근거한 갈등전환의 4대 원칙을 정립했다면, 그것을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실제 갈등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적 필진성을 추구하며 살

떠보려면 수많은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성격과 규모를 볼 때, 여기서는 다만 두 가지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만약 이 원칙을 적용하여 갈등 문제에 대응했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이 원칙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그치고자 한다. 다음의 두 사례는 비교적 최근 표면화된 사회적 갈등 사례들로서, ①이익충돌적 갈등과 공적 의제적 갈등을 각각 전형적,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례이고 ②중용사상에 근거한 4대 원칙에 따라, 갈등의 기본에 충실하고 대립을 인정하며 일방 주장의 패권을 배제하고 완전 참여를 위해 노력할 때 갈등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지며 ③갈등전환이론에서 제시하는, 갈등이 표면화되기 이전의 배경적 요소들이 갈등을 촉발하고 심화,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를 일시적이고 표면적으로만 해소하려 하면 갈등이 긍정적으로 진화되지 않고 계속 재연된다는 점을 제시하는 사례로 판단되어 선택했다.

1.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2007년에 시작되어 2015년 일단 대체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아직도 확실히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장기적이고 치열한 공공 갈등의 사례다.

1993년 제주 해역에 해군기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후 타당성 조사 및 현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당초 다른 지역보다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던 주민투표 결과는 두 달 만에 설치 반대로 반전되었으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기지 설치를 진행하자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갈등의 초기에는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국익을 내세운 정부와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 사이의, 이익 충돌적 갈등의 성격이 뚜렷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를 노려 '관광미항'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제주도와 전혀 군사시설로만 설치하려는 정부 사이에 충돌이 추가되는 한편, 해당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과 가까우며 그 자체로도 그에 준하는 생태적 보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생태환경 관련 반대론, '평화의 섬'을 지향해온 제주도에 대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일은 부당하다는 평화 관련 반대론이 제기되면서 이 갈등은 공공 의제적 갈등의 성격을 겸하게 되었다.

정치권도 갈등을 완화, 해소하기보다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갈등 시작 시점인 2007년에는 노무현 정부였으나 1년 만에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처음에는 적극 찬성, 지금은 적극 반대'한다는 야당(민주통합당) 비판론이 나오는 한편 여당(한나라당)이 합리적 논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비판론이 맞서면서 정치권의 갈등 조정 역할이 실종됨은 물론 추가적인 논란의 여지만 제공하였다(서희석, 김길웅 2011, 73).

결국 갈등은 법정에서 일단 종결의 계기를 찾을 수 있었다. 2012년, 강정마을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이다. 그리고 2015년에 시설이 완공, 군부대가 입소함으

로써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외견상 종결된다. 그러나 몇 년을 끈 갈등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으며, 초기 여론 수렴을 비롯한 여러 단계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남는 등으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주장, 해군기지 철폐 주장 등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갈등이 완전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⁹⁾ 강정마을 자체적으로도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이 발생, 오래 지켜온 공동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한다.(김정화, 이경원 2013, 15)

만약 중용 사상을 활용한 갈등전환 원칙을 이 갈등 과정에 처음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면 어떨까?

기본 충실의 원칙: 먼저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의의 기본은 “안보 역량 강화”임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되어야 한다. ‘안보보다 평화/생태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기본에 안보를 놓는다면 처음부터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 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까닭에 안보 외의 목적이 중심이 될 수는 없고(지역사회 발전, 경제 효과 창출 등을 부수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더라도), 강정마을이 아니더라도 남해안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일이 안보 강화에 유익하다는 점은 1990년대부터 남방 해로를 수호하기 위한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이견이 나타나지 않았음에 따라 뒷받침된다.

대립 인정의 원칙: 물론 안보가 중요한 가치라고 해도, 해군기지 건설이 평화나 생태환경적 가치, 강정마을 주민들의 이익 등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훼손한다면 건설 백지화가 당연하다. 안보도 평화도 생태환경 보전도(지역)발전도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적 견지에서 ‘미덕’이지만, 안보라는 미덕-목표 가치에도 평화(과도한 군비증강에 의한 안보 위기 조성을 방지한다), 생태환경 보전(비군사적 안보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 생태계를 존중하고 그 핵심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발전(지역 주민 및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안보의 효용이자 강화 수단이다) 등의 미덕-가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고 중대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다르지만 서로 양립 가능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시도할 만하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관계의 확인 작업이 기본 관련 합의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패권 배제의 원칙: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동북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빠지거나, 제주도의 토양과 해양이 기름 유출 사고 수준으로 심하게 오염되고 생물종 및 자연경관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거나, 강정마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극빈자로 전락하거나’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다시 말해서 해군기지 건설이 안보 역량 강화라는 기본을 잃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주고, 공적 가치들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 그리하여 여러 가치와 미덕 사이에,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이에 중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군사적인 목표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기지를 설계하고 건설한다’는 입장과

9) 2024년 9월에 “구럼비 기억행동의 날 집회”가 열려 강정마을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등이 해군기지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다.(원소정 2024)

‘평화,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설계, 건설한다’는 입장, ‘강정마을 주민 및 제주도민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사회경제적 보상 및 긍정 효과를 얻게끔 설계, 건설한다’는 입장 등이 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입장이 대안 도출 과정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대안이 안보 역량 강화라는 기본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도 배제되어야 한다.

완전 참여의 원칙: 이 때 갈등전환이론에서 중시하는 구조적, 배경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그렇게 격렬하고 집요한 반대가 나왔던 뒤에는 오랜 관치 문화, 즉 능력성에 치중하여 민의의 수렴은 ‘다만 참고용’ 또는 요식행위 차원에서만 실시하는 권위주의 정권 이래의 행정 관행에 여러 차례 기만당했던 주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의 울분과 불신이 있었음을, 또한 제주도가 역사상 겪었던 여러 처절한 비극과 ‘육지 것들’에 의한 착취-소외의 경험도 자리했음을 조명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진정한 ‘관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완전 참여를 통해, 정당성과 효율성이 신장됨으로써 지지된다. 제주도민 전체, 전남 화순이나 제주도 위미 등 검토되어온 기지 건설 후보지 주민들, 그리고 안보 역량이 강화되고 남방 해로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혜택을 입게 될 기업들과 국민 전체. 마지막으 스스로는 입장을 낼 수 없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도 참여해야 한다. 이들 중 일부는 논의 과정 중후반에 회의 참석 형태로, 일부는 공론조사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우는 보다 바람직한 해군기지와 그 일대가 조성되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가능한 많은 혜택을 얻도록 기부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진행 과정은 최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고, 거둬들면서도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반성하는 규칙을 실행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여러 대안을 세우며, 그 가운데 어떤 대안이 가장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수용에 부합하는지를, 집단 차원의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는 합리적(reasonable and rational)이면서도 감정적으로 수용 가능한(emotionally acceptable) 갈등으로, 갈등 주제와 갈등 당사자를 전환할 수 있다.

2. 동덕여자대학교 공학 전환 문제

‘동덕여자대학교 공학 전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2024년 후반의 ‘빅뉴스’가 되었다. 11월 7일에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해당 대학교 총학생회를 통해 공개되고, 이후 사태는 초기의 논의 과정을 우회한 상태에서 매우 급박하게 전개된다. 통상적인 피켓 시위나 촛불집회의 차원을 넘어 건물이나 동상을 훼손하고, 학내 행사를 봉쇄하며, 교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언을 하는 등 일부 정치인의 표현처럼 ‘비문명’적인 행동이 자행되었고, 이 내용이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끊임없이 유포되면서 한국 사회는 2016년의 ‘강남역 살인사건’ 직후 격렬히 전개된 ‘급진’ 여성주의 운동과 이를 비판하고 혐오하는 입장 사이의 첨예했던 갈등 속으로 다시 한 번 빠져들여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 문제를 단지 한 대학교의 변화와 개편의 문제, 그에 따라 학교 당국과 재학생들이 이의 충돌적 갈등에 접어든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아직도 억압받는 여성들'이라는 공적 의제적 갈등으로 빠르게 발전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6년 직후에 그랬듯, 이른바 'PC주의'라 총칭되는 여성주의적 의제를 '독선과 광기'로 비하하고 매도하는 입장이 재현되면서 동덕여대 문제에 대해서도 조롱과 혐오의 반응을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학교 측은 '저출생 상황에서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가운데 남녀공학 전환도 포함되었다'고 밝히는 데 대해 학생 측은 성신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등 다른 여자대학교와 연대하면서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는 비타협적 태도를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양 진영의 대화와 갈등 종결 노력은 미비하며,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학생 시위를 불법 행동, 교육권 침해 행동으로만 규정하고(동덕여자대학교 비상대책위원장 2024) 이에 맞서 학생들은 학생총회를 열고 '99퍼센트가 공학 전환에 반대했다'며 '학교 당국이 공학 전환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투쟁하겠다'고 천명하는 등(이율립 2024) '강대강' 대립구도를 이어간 결과, 결국 어느 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상황이 일단 소강 국면에 이르렀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문제가 아직 본격적인 검토-추진 과정에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급속하게 격화된 반응이 불거진 배경에는 한편으로 학교 당국(동덕여대만이 아닌)이 중요한 학제 개편 결정에서 학생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무시해 왔던 데 따른 불만과 불신이 있다. 동덕여대를 포함해, 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는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유서 깊은 학과를 폐과-통폐합하거나 학사과정을 개편하면서 재학생, 교직원, 동문 등의 입장은 대부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입장이 이토록 무시되어도 되는가?'라는 개탄이 누적되었으며, 그것이 동덕여대 갈등의 급속 격화의 한 배경적 원인이 되었으리라 본다. 또한 2016년 직후의 폭발적인 여성주의적 요구가 제도적, 문화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N번방 사건', '딤페이커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성착취적 사건이 불거지면서 '아직도 이 땅에서 여성은 위험하고 취약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사실도 이에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이 갈등 상황에 중용 사상적 갈등전환 원칙이 적용되었다면?

기본 충실의 원칙: 먼저 이 갈등 논의의 기본은 "학교 발전"으로 합의되었어야 한다. 이것이 한 대학교의 차원을 넘는 공공의제적 갈등으로 비화되기는 했지만, 이 갈등의 귀결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입지를 근본적으로 높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와 직결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애초에 한 대학교의 구조 전환이 학내에서 인정되느냐 여부를 둘러싼 문제였으므로, 그렇게 합의하는데 어려움은 크지 않으리라 본다.

대립 인정의 원칙: 그렇다면 과연 학교 발전이란 무엇인가, 창립 이래 계속해온 여성 교육의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가, 시대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덕여자대학교라는 학원이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 차원에서 높은 수준을 차지하도록 노력함이 곧 발전을 지향하는 것인가, 등이 합의를 통해 결론지어져야 한다. 이때 대립되는 두 가치-미덕이

반드시 서로를 배제하지는 않음을 성찰해야 한다. ‘인풋과 아웃풋’이 오히려 여성 교육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그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으며, 여성 교육의 가치가 반드시 교육 공간을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채우는 일로 유지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당분간 남녀공학 전환을 유보하되 일정 조건과 기한을 두고 재논의한다’, ‘남성 신입생을 일부 받아들여 여성교육 및 성평등교육에 대한 특수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등등의 대안들이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다.

폐권 배제의 원칙: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양 극단의 대안을 고집하는 입장, 즉 ‘동덕여자대학교에 남학생을 한 명이라도 들일 바에는 폐교가 대안이다’라는 입장이나, ‘현행 입시교육 체계에서 보다 나은 입지를 차지하려면 여자대학이라는 명칭을 무조건 떼어버려야 한다’는 입장은 모두 기본에서 이탈하는 입장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동덕여자대학교의 ‘발전’이 급진 여성주의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나, 학생들과 시민사회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신입생 모집 가능성을 높이고자 재단의 독단으로 학교의 중대사가 진행되는 학교로 남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 참여의 원칙: 그리고 ‘학교 대 학생회 중심의 재학생’을 떠난 모든 이해관계자들, 즉 동문들과 교직원들, 대학원생들과 학부 4학년생들(그들은 취업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에 일반적인 재학생들과 이해관계가 다소 다를 수 있다), 학부모들, 타 여자대학교, 교육부, 여성 문제 및 교육개혁 문제 관련 연구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능률성’만을 기준으로, 교육부-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학교 체제와 교육 과정을 재편해 왔던 그 동안의 관행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개선 모색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동덕여자대학교의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원만하고 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성 문제-고등교육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가 마련된다면, 이 갈등은 공동체 전체에 유익할 것이다.¹⁰⁾

V. 결론

오늘날 한국사회는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사실 그런 갈등이 유혈사태를 포함하는 극단적인 국면으로는 쉽게 격화되지 않지만, 갈등 해소 및 관리 방식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갈등 해소-관리의 주된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거나 오히려 증폭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갈등이 주 당사자 사이의 일시적 거래에 따른 타협이나 권위를 동원한 강제적 종료 조치로 많은 논란을 남긴 채 임시 종료되고, 따라서 해소되지 못한 갈등 요인이 언제고 다시 촉발되고

10) 2025년 7월에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한 ‘대학의 미래발전 방향과 공학전환 여부에 대한 숙의기구’가 설치되고, 9월까지 4회의 ‘타운홀 미팅’이 진행되어 이를 논의함으로써, 이에 가까운 숙의적 해결의 과정은 이뤄졌다. 그 상세한 내역과 결과는 2025년 11월 이후 구체화될 예정이다.(동덕여자대학교, 2025)

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음을 확실하다.

갈등 해소 및 관리에 대한 여러 이론이 한계를 노출했고, 그에 따라 갈등전환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그 역시 여러 가지 한계점(현실 상황에서 적용되고 유지될 가능성 미비, 공공 의제적 갈등에 치우쳐 있는 성격,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장기적, 심층적, 다원적인 접근법 요구 등등)에 직면해 있다. 그리하여 대체로 갈등전환 이론의 원리에 따른 접근법을 수용하되, 갈등 당사자들 사이의 (계속되는)합의에 근거함으로써 갈등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일탈과 혼란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도모할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이 요청되었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사상을 활용한 갈등전환 4대 원칙을 고안하고 제시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이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그리고 그러한 경험에 따른 교훈에서 구성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세부 원칙들의 정립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이 원칙들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이어서, 실제 논의 당사자들에게 외면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 자체에서 이익을 찾으며 갈등의 해소를 기피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간단하고, 대의명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어느 쪽의 희생도 강요하지 않는 원칙을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데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리라 여겨진다. 또 일부에서는 ‘완전 참여의 원칙’ 등이 갈등 논의 과정을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도록 만들어, 과정 및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 능률성과 효과성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참여자들의 층위와 참여 단계/수준을 갈등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정함으로써 대체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가령 논의의 시작, 논의의 기본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부터 모든 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일부 결정에만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만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완전 참여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의견 수렴 참여 이해관계자더라도 최종 결론에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현실적 필요와 원칙적 필요를 두루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종료’된 갈등 사례들로, 4대 원칙을 비롯한 중용사상적 갈등 전환 모델은 가상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갈등의 ‘진원지’는 아직 존재하며 따라서 어느 시점에 재연될(유사한 사례의 형태로라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현 시점에서 이 모델의 실천적 구체화, 체계화를 거쳐 두 갈등 사례의 ‘사후 처리’에 적용할 이론적, 실천적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명환 외. 2017. “갈등전환: 새로운 관점에 대한 논의”,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1-25.
- 김요한. 2014.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나타난 감정과 이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제74집. 105-127.
- 김정화, 이경원. 2013.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0권 제1호. 1-24.
- 노정연. 2021. “전경련 “한국 ‘갈등지수’ OECD 국가 중 3위…갈등관리 능력은 하위권”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8191618001> (검색일: 2025. 10. 1)
- 동덕여자대학교, 2025.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 타운홀미팅’ 성료…숙의과정 마무리 단계”
<https://www.hani.co.kr/arti/economy/biznews/1220936.html> (검색일: 2025. 10. 4)
- 동덕여자대학교 비상대책위원장, 2024. “당부의 글”
<https://www.dongduk.ac.kr/www/contents/kor-noti.do?schM=view&act=UPDATE&page=1&viewCount=10&id=88853&schBdcode=&schGroupCode=&etc1=8382> (검색일: 2025. 10. 1)
- 서휘석, 김길웅. 2011. “군사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원인분석과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해군기지 입지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 3호. 69-95.
- 성신형. 2024. “한국 사회 갈등 현상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성찰”, 「기독교철학」. 제39호. 7-31.
- 안도연, 이훈진. 2019. “중용(中庸)적 태도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대인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38권 제2호. 147-183.
- 원소정. 2024. “세계 각국서 제주해군기지에 모인 이유…“제주 군사기지화 막자”,
<https://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9826> (검색일: 2025. 10. 4)
- 이무철. 2018. “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와 극단적 양극화 분석: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의 제도화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제2호. 2018년(여름) 통권 101호. 67-97.
- 이율립. 2024. “동덕여대 학생총회서 1천973명 투표…2명 빼고 “남녀공학 반대”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0128500004> (검색일: 2025. 10. 1)
- 장정아. 2025.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의 현대적 의의: 다문화 사회에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77. 29-60.
- 정주진. 2010.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은 가능한가』. 서울: 아르케.
- 정해식 외. 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미란. 2022. “도덕교육에서 감정의 위상: 아리스토텔레스 ‘파토스’(pathos) 개념의 애매성”, 「도덕교육연구」. 제34권 4호. 1-19.
- 최상용. 2012. 『중용의 정치사상』. 서울: 까치글방.
- 평화갈등연구소, 2016. “갈등전환의 이해” <https://peaceconflict.tistory.com/169> (검색일: 2025. 10. 1)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5. https://www.kadr.or.kr/post/2024-한국인의-공공갈등-의식조사-공동기획_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한국리서치 (검색일: 2025. 10. 1)
- 함규진. 2024. “시민교육에서의 정의론 : 아리스토텔레스의 mesothēs와 유가의 中庸을 원칙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제85호. 133-157.

- Achtenberg, D. 2002. *Cognition of Value in Aristotle's Ethics: Promise of Enrichment, Threat of Destruc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Aristotle, *Nicomachean Ethics*(EN).
- Aristotle, *Eudemian Ethics*(HE).
- Aristotle, *On the Soul*(PP).
- Aristotle, *Politics*(PO).
- Gutmann, A. and Thompson, D.,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oehn, G. 2022. "Aristotle's Mesotēs in theory and practice",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39 (4): 323-337.
- Mitchell, C., 2002. "Beyond Resolution: What Does Conflict Transformation Actually Transform?", *Peace and Conflict Studies*, 9(1). 1-23.
- Peterson, A. 2011. *Civic Republicanism and Civic Education: The Education of Citizens*. London: Palgrave Macmillan.
- Schilling, K. 2012. *Peacebuilding & Conflict Transformation: A Resource Book*. Berlin: CPS/BfdW Bafoussam.
- Lederach, J. P. 2018. *Little Book of Conflict Transformation: Clear Articul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s By A Pioneer In The Field(Justice and Peacebuilding)*. Epsom. 박지호 역. 대장간.

함규진: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임. 한국정치학회 특임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한국근대정치사상, 비교민주주의, 시민교육, 통일교육 등 동서비교정치사상과 시민교육에 관한 주제임. 최근 논문으로는 시민교육에서의 정의론: 아리스토텔레스의 mesothēs와 유가의 中庸을 원칙으로(2024), '동포(同胞)'의 정치적 의미와 그 근대 전환기적 변형(2023) 등이 있음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esotēs and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 for contemporary conflicts

Kyu-Jin H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ountermeasures for serious conflicts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ristotle's concept of the mean(mesotēs) suggests that a virtue can turn into a vice when it is excessive or deficient, or when it is biased either within itself or between other virtues. By avoiding this and choosing the middle ground, the original purpose can be preserved and achieved. This concept shows an affinity with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 as a method of addressing modern conflict situations. Accordingly, the study sought ways to apply the philosophy of the mean to contemporary contexts while adopting the problem consciousness and methodology of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

Consequently, this study established four principles: Adherence to the Fundamentals, Recognition of Opposition, Exclusion of Hegemony, and Full Participation, and hypothetically applied them to two case studies of conflict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f these principles are further specified and systematized for use in future conflict situations, they can serve as a reliable countermeasure to the deepening conflict in Korean society, while making it possible to realize a process of democratically pursuing the common good by exercising practical wisdom in modern society.

[Keywords: Social Conflict, Mesotēs,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 deliberation]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